

기업성장펀드 17일 코스닥 입성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매매 가능

비상장 벤처 등에 60% 투자 의무 설정·설립 후 90일내 코스닥 상장 최소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금융위, 내달까지 시스템 정비 완료

(BDC의 운용대상) /금융위원회

주 투자대상 기업 60% 이상	안전자산 10% 이상	재량 30% 미만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조합 등 단, 코스닥 상장기업 및 조합 등은 각각 30%까지 계산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에 따라 운용 코스닥, 조합 등도 추가 가능

‘기업성장펀드’(BDC)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춰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코스닥 시장에 펀드가 상장되는 것은 약 20년 만으로, 일반 투자자도 주식처럼 거래하며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혁신기업과 벤처조합 지분,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이나 금전 대여 형태로 가능하다. 다만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금전 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BDC는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나 예·적금 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최대 30% 범위 내에서 공모펀드 규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BDC는 최소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최소 모집 규모는 300억원이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모집 금액에 따라 최대 5% 수준의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마다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분기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BDC는 설정 또는 설립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 전 공모에 참여하거나 상장 이후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사 MTS나 H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기존 공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종합

자산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캐피탈(VC)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오는 4월까지 완료한 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절차를 거쳐 BDC 상품 출시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혁신기업 성장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했다”며 “향후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전쟁 리스크에 투심 출렁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코스피 향방 어디로

국내 증시 급등락 반복에 개미 불안 전쟁 장기화되면 추가 하락 위험 일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



ChatGPT로 생성한 힘들어하는 투자자 모습.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코스피의 ‘코’자만 들어도 불안하다. 이란 전쟁으로 투자 성적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수차례에 걸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주와 코스닥 주식에 3500만원가량 투자했다. 최씨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 모으고 있는데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 내가 사면 다음날 떨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동 불안에 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 향방이 중동 리스크 지속 기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조기에 마무리되면 빨리 안정을 되찾겠지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다. 다만, 지난 4일과 같은 폭락 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스피 1차 반등 목표는 5800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1차 반등 목표치는 전일 갭 하락을 했던 5800포인트가 될 듯하며 이후 직전 고점 회복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투자심리 회복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급락으로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 위기에 처할 뻔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반등이 긴급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의 불확실성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월가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부상 중인 사모신용 부실화는 지속해서 팔로우(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피 급락을 초래했던 지정학적 사건은 걸프전(1990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년~현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걸프전은 코스피 저점까지 2개월 반이 걸렸고 누적 하락률은 약 15%였다. 러-우 사태로 저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7개월이 소요됐고 누적 하락률은

약 20%였다”면서 “이번 중동 사태가 시작된 후 2거래일 만에 -18%를 기록했다는 건 전쟁 리스크를 일시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연구원은 추가 급락으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추가수익비율(PER)이 전일 증가 기준 8.1배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는데, 이런 수준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에서만 봤던 것이라면서 “현재는 팔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사야 할 자리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현 시장의 극단적 과민반응을 2026년 코스피 7000포인트선 도약을 위한 시장 재진입 및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급락이 벌어지기 이전 수준의 상승 모멘텀이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와 이익 전망은 대체로 동행하지만 변곡점은 이익 전망보다 주가가 더 빨랐다”면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작년 9월 이후 시작된 이례적 이익 전망 상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EPS)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이익 전망은 과거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대 평균 30% 하향 조정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가 20%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하면 적정 코스피 지수는 5070포인트로 계산되며 ±500포인트로 상·하단을 적용하면 하단은 4500포인트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기업 영업실적 개선... 업종 격차는 뚜렷”

S&P, 한국기업 보고서

“삼전·하닉 사상 최대실적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일 한국 기업의 전체 영업 실적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산업별 실적 격차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 업종별 격차 확대, 저점은 통과’ 제하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추이는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

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주도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기업 전체 실적과 수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중동 분쟁이 추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의 전략적·상업적 원유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이나 지속적 가격 상승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S&P는 “관세 비용, 투자 부담, 전기차(EV) 관련 정책 변화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크게 노출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정책적 가시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상태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금융상품 전 과정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사전예방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홍콩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가입 전 위험 고지와 가입 이후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라이빗뱅크(PB)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무분별한 금융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양방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검사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본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함께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거래소, 밸류업 컨설팅 대상·범위 확대

자산총액 2조 미만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동으로 일대일 맞춤형 밸류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 지원을 위해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밸류업 컨설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2조원 미만까지 대폭 늘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착을 위해 고배당 기업과 기술특례 신규상장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범위도 공시 연계 강화를 위해 재무지표 분석 중심의 1차 컨설팅에서 기업이 직접 작성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초안을 검토해 주는 2차 컨설팅을 도입한다. 컨설팅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상장기업의 신청을 거쳐 컨설팅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진단, 현장방문,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